

군대도 안전보건관리를!

유형섭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직업환경의학 수련을 마치고 육군 군의관으로 3년간 의무복무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다 보니 육군 전반의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장교로 보직이 정해졌고, 오래 근무하진 않았지만 지난 4개월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육군 내 산업보건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군은 산업안전을 비롯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투준비안전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어 관리하고 있고, 예하 부대에도 부대 내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직은 올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박람회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매년 육군안전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외부의 산업안전 관련 기관이나 협회들과 많은 교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보건의 경우에는 아직 인력이나 역량을 덜 배치하고 있고, 사실상 육군 내 산업보건을 전담하는 인력은 저 하나입니다. 의무나 인사과에서 일부 인원에게 해당 업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업무도 많은 와중에, 잘 알지 못하는 산업보건에 대한 업무까지 맡게 되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군에서 어떠한 산업보건적 필요가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군에서는 차량 및 무기 정비, 유류 관리, 실내사격 통제, 식품 검사 실험, 의료 등 다양한 직역들이 있으며 해당 업종에서 소음, 유기용제, 중금속 등에 대한 노출이 발생합니다.

군의 산업보건 특성과 산업보건전담 인력 및 부서의 필요성

군의 산업보건 특성을 보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성격과 소규모사업장의 성격 모두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행정과 국방행정의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2장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장 안전보건관리규정, 3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즉, 군 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을 담당할 조직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없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정 및 교육을 진행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공공기관 및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의 예외조항으로서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 훈령을 따로 두어, 부대 내 안전보건을 담당할 부서나 작업장 관리자를 두고 각급 부대의 장이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부대별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여 외부 업체를 통한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일부 군 병원을 제외하고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지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직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집계된 육군 내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유해작업장 수는 총 2천여 개로 추산되고, 총 근무자는 2만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즉, 작업장별 근무 인원수가 적고, 실제 50명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작업장도 34%로 소규모 작업장 중에서도 작업 인원이 소수인 작업장이 많습니다. 이는 육군뿐 아니라 타 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규모 작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아무리 설정해둔다 한들, 자신에게 부여된 기존 업무를 하는 동시에 산업보건관리의 업무를 병행하기 쉽지 않고, 외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민간의 소규모 사업장과 달리, 군의 예하부대에 속해 있는 작업장으로서 top down 방식의 업무지시를 비교적 잘 따르기에 보건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상급 부대에서 잘 지도한다면, 민간과는 다르게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산 또한 소규모 작업장이 직접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부대에서 잘 하달되어 부족한 보호구나 시설 개선 등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부대에도 이를 전달할 인력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물론 군에서도 특수건강검진과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이 점차 인정됨에 따라, 지난 10년간 검진인원과 측정 작업장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또한, 야간작업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국방부와 인권위원회에서 거듭 강조되면서 수검자가 증가세에 있으며, 산업보건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역시 점차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소견자 관리를 진행할 인력이 부족하고, 기준치 초과 부대에 대해 공병실 환경과에서 지도방

문하여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 하나, 해당 부서도 산업위생전문가가 없는 실정이라 국군의학연구소에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육군 내 보건관리자 직위 편제를 상급 부대에 배치하도록 의뢰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안전과 보건이 따로 가기보다는 관련 환경, 군수, 의무 부서들이 모여 산업안전보건을 총괄할 부서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음 노출 관리의 필요성

검진과 측정에서 유소견자가 발생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된 유해물질은 소음입니다. 사격장과 정비창 등에서 소음 기준치가 초과하고 있고, 신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도 3-40명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인원에는 전자감응식 청력보호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음 노출에 대한 공학적 관리가 어려워 보호구 착용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소음 기준치가 초과한 실내 사격장에 방문해 보니, 귀덮개를 착용해도 충격소음이 상당하고, 사격장에서 상주하는 교관 장병 및 군무원들은 장기간 근무 시 소음 노출로 인한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적어도 귀마개와 귀덮개를 동시 착용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관련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예하부대에 하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군의 경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대해 과거부터 인지하고 있어, 자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공군 내 병원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소음 발생 작업장 근무자의 청력 보호구 착용 상태 및 관리 점검, 작업장 보건관리와 비행단 및 부대에 소음성 난청 예방 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육군 또한 소음 노출 위험이 큰 부대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학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위생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지난 4개월간 군에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서 근무하며 들었던 고민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군 내 산업보건담당 인력 보충과 체제를 마련하고, 소음 노출에 대한 보건 관리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앞으로는 민간 산업보건 기관과의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